

# 전문지 기자들이 분석하는 육계업계 3대 현안

## 1.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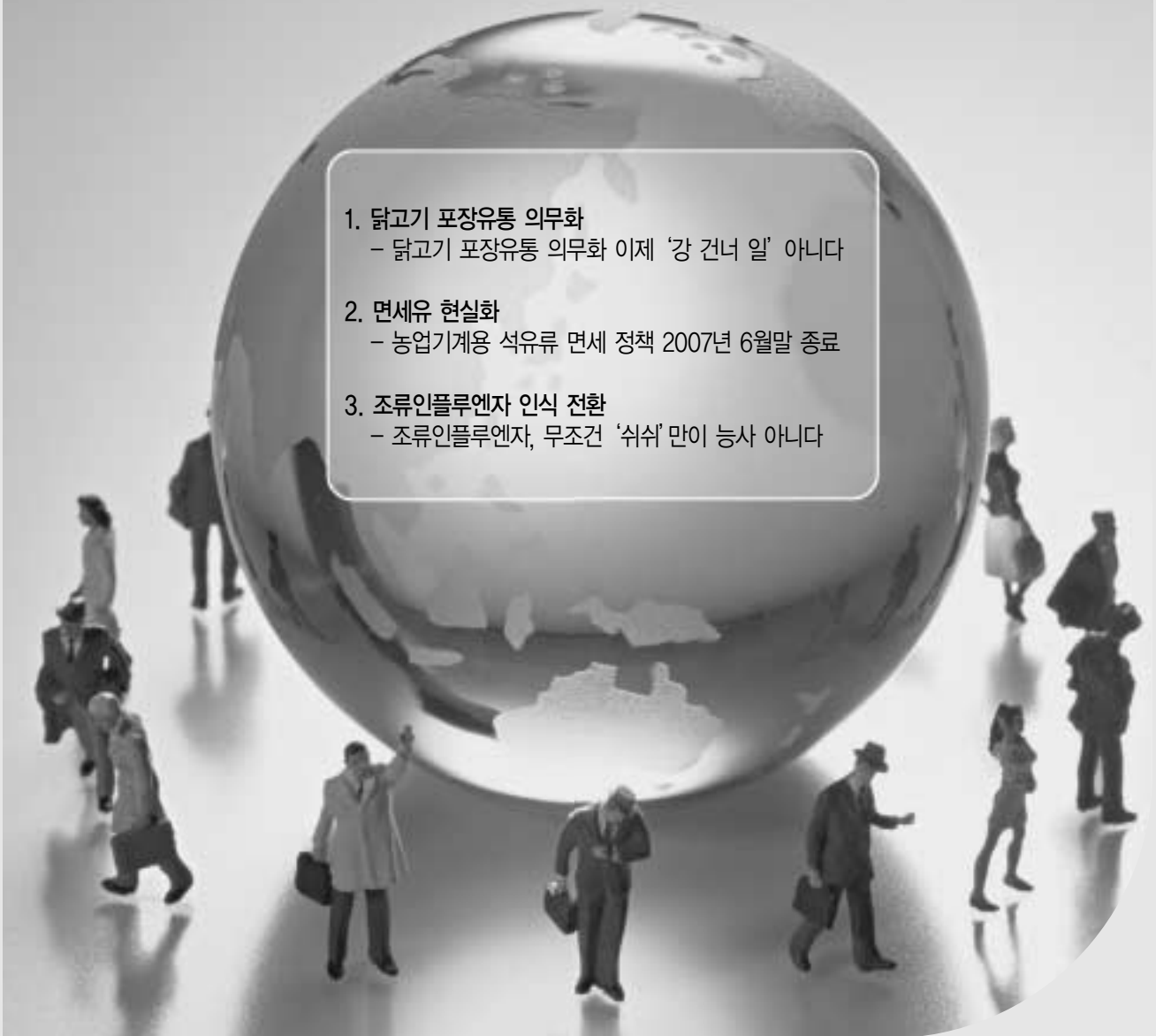
-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이제 '강 건너 일' 아니다

## 2. 면세유 현실화

- 농업기계용 석유류 면세 정책 2007년 6월말 종료

## 3. 조류인플루엔자 인식 전환

- 조류인플루엔자, 무조건 '쉬쉬' 만이 능사 아니다



##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이제 ‘강 건너 일’ 아니다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와 관련된 시행령이 지난달 고시됐다.

하루 8만수 이상의 닭을 취급하는 도계장에서는 이제 닭고기 포장유통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도계장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 두 향 기자  
농수축산신문

### 앨빈 토플러가 틀렸나?

그러나 법이 완성된 지금, 닭고기 업계가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저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최근 발간된 저서 ‘부의 미래’를 통해 “기업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료조직, 정책과 법 제도는 30마일도 안되는 속도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며 “속도의 차이가 상호충돌을 야기하고 변화, 발전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언급했지만,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와 관련해서만큼은 그 가 틀린 듯하다.

당장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일 8만마리 이상의 도계장을 보유한 육계 계열업체 5곳

조차 제대로 준비가 돼있다 호언하기 어렵다.

포장유통에 대해 “내년 1월부터 한다고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운을 띄우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혹은 “출고물량의 25~30% 수준인 포장 닭고기를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중”이라 자신하면서도 “아직 대리점 등 내부 거래처와의 스펙 등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다”고 말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포장기계는 차차 들여올 계획”이라며 “칠러냉각 이후 냉장보관을 거쳐 출고하는 시점의 심부온도를 5℃ 이하로 떨어뜨려야 포장유통 과정에서의 미생물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얼음을 동원해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업체도 이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실제 상황

현실은 계열업체측의 이 같은 막연한 예상이나 계획과는 동떨어져 흘러가고 있다.

농림부 위생과 관계자는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에 관한 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열화업체로부터 건의가 있어왔고 나름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포장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포장의 개념이 외기를 차단하고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면 기존의 벌크는 물론 비닐봉투나 트레이 포장으로는 한계가 있어 진공밀봉포장이 돼야 한다”며 “국내에 계육 스펙에 맞는 진공포장기계가 설치된 곳은 한 곳 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시행된다는 말은 있지만 업계에서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도깨비 법이라 생각하는 지 업계에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인지 아직 주문 문의가 없다”며 “장비 설치 가동시기를 최대한 당겨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미 법 시행시기에 맞추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수입육 비중이 높아지면서부터 그 필요성이 업계로부터 제기돼왔던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는 이제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인 것이다.

### 충분한 홍보 통한 공론화 과정 실종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업체의 안이한 태도 탓만 할 수 없다.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농협 양재동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체포장의 닭고기

포장단위를 설정하고 내부 거래 스펙을 충분히 논의하는 등 닭 계열업체 뿐 아니라 1,000여 개로 추정되는 대리점 등 유통업체에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미나나 공청회 한 번 없었다.

홍보의 필요성은 농림부도 공감해 당초 지난 7~8월중 포장방법과 사례 및 정책 방향에 관한 교육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발됐다.

계육에 가장 적합한 포장시설 발주와 공간 확보를 서두르고 포장유통시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홍보가 지금이라도 실시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로 인한 위생 안전성 확보효과와 원가상승요인을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외국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된 닭고기 제품

전 업계 관계자에게도 충분히 알려야 하는 등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공감대 형성 절차가 절실하다.

### 초심으로...


포장유통 의무화는 날로 높아지는 소비자의 위생 안전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수입육과의 차별화 전략 일환으로 업계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에의 로비를 통해 국가단위로 적용되는 방역개념을 지역단위로 바꾸고자 로비를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로 국산 닭고기 수요가 늘고 일시적인 생산성 감소로 닭 가격이 오르는 '요행(?)'을 무작정 바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찬바람만 불면 닭고기 업계를 긴장시키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소비위축 우려 등으로부터 국산 닭고기는 다르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피력하고자 한다면 포장유통 의무화와 같은 위생·안전성 확보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계열업체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국산 닭고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일보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업계의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농림부와 계육협회에서의 업무 지원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계육 포장을 위한 기계